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17호

### 스포츠인권연구소

**[성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정책 퇴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스포츠인권연구소 / 체육시민연대 / 문화연대

###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 인터뷰

**“학생선수 학습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

### 尹정부 체육정책

**윤석열 정부 스포츠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보완이 절실한 부분은?**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 교육부

**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

이도연 연합뉴스 기자

### 스포츠 마일리지

**체육, 건강 시설서 현금처럼 쓰는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한다**

김영신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정책 퇴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공동성명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체육정책 기조가 우려된다.

지난 4월 15일 인수위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에 오랫동안 만연해 온 인권 유린과 방치가 역대 정부의 인권의식 부재와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결정이다. 왜 어린 선수들이 성폭행을 당해야 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아니면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퇴보시키고, 체육 기득세력의 이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앞으로 올 세대가 누릴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기존 세대가 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불행을 막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무산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다.

인수위의 발표에 대한체육회가 즉각 환영했다. 왜일까? 이번 발표는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체육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에 대해 현장의 체육지도자, 학부모, 체육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이미 3년 전에 제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각 체육단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이를 수용할 준비의 시간도 충분했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단체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왔고 명백한 변화의 시간을 부정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체육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대며 회피했다.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오래된 체육계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정하고 사회의 상식적 기준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 족쇄가 되어 운동 아니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구조. 학부모와 지도자에게 오로지 경기 실적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 이를 위한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눈 감아오지 않았는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은 이러한 비정상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각 체육단체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오래다. 이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의 당위다.

혁신위 권고안은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인과 체육계의 완전한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는 마치 권고안의 모든 것이 현장을 이해 못하는 부당한 주장으로 치부하며, 입맛에 맞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의 일곱 개의 권고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인수위는 혁신위의 권고안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어떤 목표를 지향했는지 그래서 결국 그 혜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혁신위의 권고안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스포츠향유를 지향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면 이번 재검토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새 정부의 체육정책의 기조라면, 차기 정부의 체육정책은 오로지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과 체육단체만을 위한 것임을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기껏 체육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은 그릇의 위원회가 아니길 기대한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19일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 [차기 정부 체육 과제 / 인터뷰: 정용철 서강대 교수] “학생선수 학습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정용철 서강대 교수 | △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집행위원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처장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진 이의종

## ■코로나19가 체육 분야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나 프로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처음엔 '어떻게 관중 없이 경기를 하느냐. 이걸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관중 경기에 대체로 적응했다. 야외에서 하는 골프 같은 특정 종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상한가를 쳤고 걷기도 엄청나게 활성화됐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듯 코로나19 상황은 체육, 신체 활동에 대한 전국민적 각성의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첫해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완전히 비대면으로 1년을 보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스포츠에 대한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체육에 대한 소양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가상현실(VR)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접근할 통로를 열어줬어야 했는데 다 닫힌 상태에서 방법이 없었고 당시에는 감염병 대응에 급급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장기적 영향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문제다.

##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좀 더 스포츠 활동을 즐기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요즘 방송인 김민경씨가 나이키 광고 모델을 하는데 주제가 '모두의 운동장'이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의 주제가 바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였다.

나이키 광고가 핵심을 잘 짚었다. 김민경의 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선수의 전형적 이미지와 다른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을 즐기고 잘 하며 이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나이키 광고는 특정 몸을 가져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신선하고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민간기업의 캠페인이지만 고무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탑다운' 방식이어서 자생력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의 특징은 폐쇄성에 있다. 특정 단체나 동호인들이 시설과 장소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네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에도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제 명실상부한 '모두의 운동장'이 돼야 한다. 여성이, 어린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 근육을 과시하는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원할 때 10분 거리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접근성, 개방성이 보장돼야 한다.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오후 4시 이후에는 스포츠클럽 담당자가 교장 대신 학교시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동호회나 단체가 독점하는 시설들을 풀어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는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 계속

## ■체육계에서 폭력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선수들 상담을 해 보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갑질'이나 감독과의 관계, 성희롱 성폭력 문제들이다. 경기를 어떻게 잘 이끌고 메달은 어떻게 딸지 2시간여 얘기하다가 선수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옛날 얘기'라고 하는 전문체육단체 관계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러내놓고 하는 폭력은 많이 줄었지만 더 교묘한 방식으로 선수들을 착취한다. 이를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보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덮는 것이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다. 구조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해결할 수 있다.

##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

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학생선수라고 한다. 학교에 다니는데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학생이 맞는데 마치 학생이 아닌 것처럼 이들 스스로, 그들을 바라보는 학교 관계자도 생각한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학습권 침해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선수 1명이 펜싱을 그만두려고 한다. 펜싱을 계속 하면 자신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가 나가면 팀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코치는 '나는 너를 절대 운동 그만두게 못한다'고 호통친다. 또 그 드라마에서는 대학진학을 결심한 선수에게 '수능 400점 중에 80점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라며 걱정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400점 중 80점이 불안한 수준인 거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위 '밑에서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수많은 깔린 인생들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의 핵심이다. 특히 야구 축구 농구 같은 인기 종목이 아니라 펜싱 사격 등의 종목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가 하고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선수 양성 체계는 잔인한 외줄 인생이다. 줄타기를 하면서 가다가 떨어지면 이를 받쳐줄 안전망이 없다. 굉장히 위태롭다. 외국에서는 선수들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를 '듀얼 커리어(dual career)'라고 한다. 전문적으로 운동해온 분야를 깊이 들어가거나 법학 등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대부분 다른 분야로 전향할 때 운동선수 경험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운동선수 경력을 자산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간다.

## ■혁신위 권고는 잘 이행되고 있나.

혁신위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라는 국민적 충격 속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스포츠 개혁을 완수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체육계의 위기의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만나 권고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발표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의 의지가 컸기 때문에 동력이 굉장히 컸고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대로 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고를 7차까지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교체육 정상화(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다뤘다.

혁신위는 전문체육을 포함한 전체 스포츠 정책을 하나로 껴 개선하고자 했다. 이전에는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혹은 유소년체육 등 하나씩만 개선하고자 하다 보니 해결이 안됐다. 이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차별로 세부적인 정책 실행까지 언급했다.

혁신위에는 민간위원 15명에 당연직 정부 부처 차관급 위원 5명이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함께했고 이들 모두 권고안에 최종사인을 했다.

다음 장 계속

문재인정부의 체육개혁 의지가 떨어지면서 혁신위는 1기에서 그쳤다. 이후 문체부와 교육부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데 워낙 전문체육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학생선수의 인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라는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이전처럼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한다. 학습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권리 중 하나인데 이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돌된다.

학부모들은 사실, 권고안에 반대한다. 자기 자식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내 자녀가 고3이고 전국대회 입상 성적이 있어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중에라도 경기가 열리고 이에 출전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종목단체에 있다. 예를 들면 과학적 지원은 받아들이고 학생선수 학습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식이다. 정치권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표가 되면 움직이는 식이다. 안타까운 지점이다.

### ■체육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는 진전이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개정되면서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국위 선양이 우리나라 전문체육 최우선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삭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2021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됐다. 다만 스포츠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맞게 조항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법안 뒤로 갈수록 스포츠진흥법처럼 만들어졌다. 기본법이라는 인권의 탈을 쓴 일종의 진흥법이 돼 아쉽다. 이에 스포츠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모으고 있다.

###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위는 1차 권고에서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스포츠 인권 기관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인권센터들의 기능을 모아 좀 더 효과적, 통합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했다.

원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니라 '스포츠인권센터'라는 명칭이었다. 인권과 윤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윤리'에는 '가해자를 벌 준다'는 의미가 강한데 '인권'은 보다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곳이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다만 문체부 산하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고 예산이나 인력도 기존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다. 특히 전문인력으로 뽑은 조사관들이 다른 분야 조사관이라 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이사장과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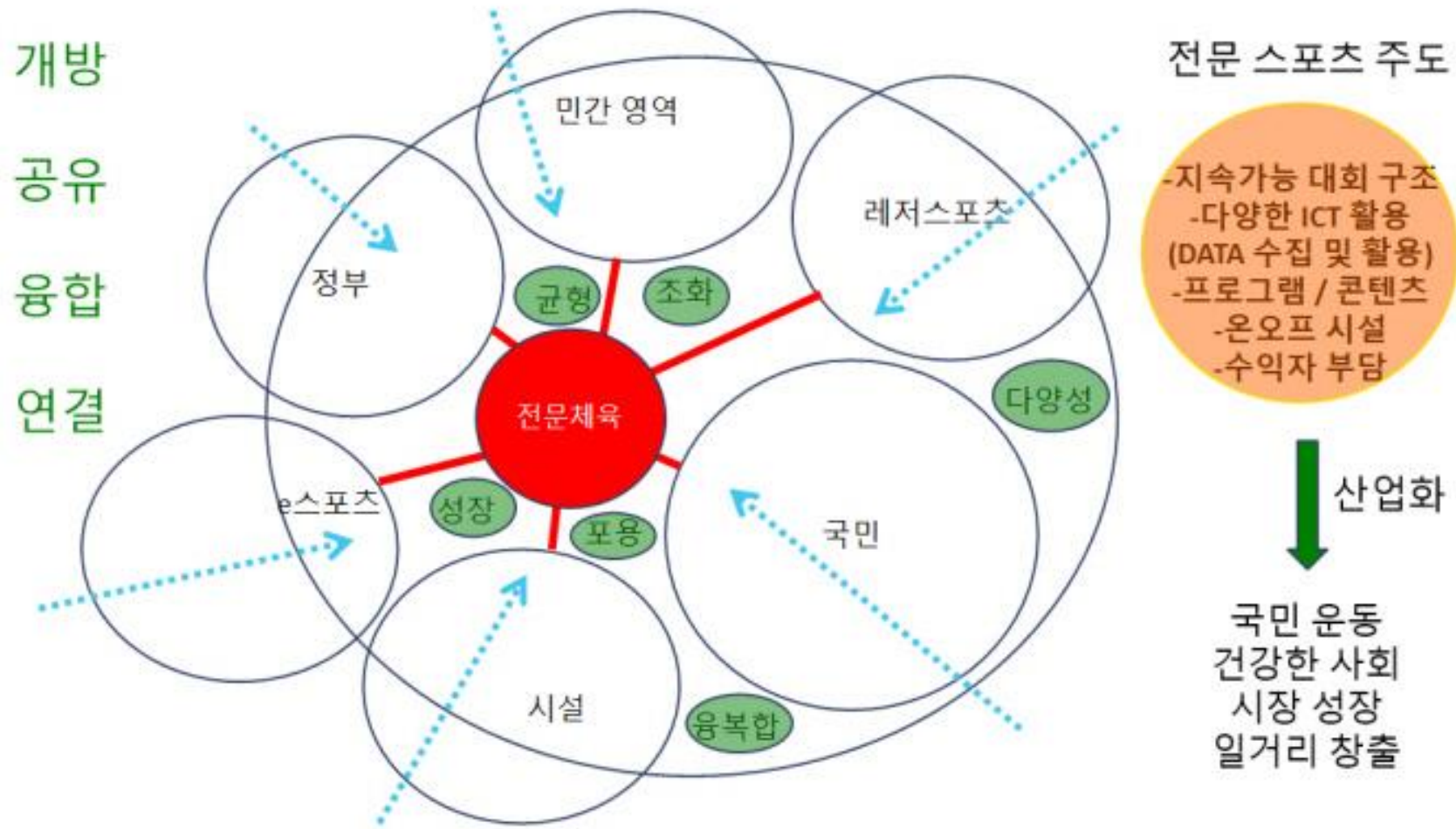
스포츠기본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시행이 될 거다. 없던 게 생기니까 나름대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과연 위원회가 전문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있다.

대선 기간에는 체육부, 체육청 신설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일본은 스포츠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독립 부처가 체육의 발전에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문체부 안에 하나의 부서로 있는 것보다 전문 업무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독립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고민이 된다.

# 윤석열 정부 스포츠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보완이 절실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발표한 스포츠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제 △유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노인체육활동 지원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지원 △체육재정 확대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e스포츠, 미래산업 육성 등이 주요정책이다. 스포츠 인센티브제에서 건강보험료 환급 대신 지역화폐 지급으로 바꾸는 것 정도를 빼면 대선 공약이 대부분 유지된다.

스포츠 정책을 분석하면 5가지 정도는 긍정적이다. △생애 주기 연령대 메우기(어린이·초등생) △공공과 민간 연결 △전문 선수와 생활 체육인 선순환 구조 구축 △융복합화, 시장화, 산업화 추구 △직업, 일거리 창출 기반 마련이다. 물론 이것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도'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동시에 보완해야 하는 것도 많다. △급조된 정책, 정책 방향 '미완성' △떨어지는 세부 정책 완성도, 미흡한 정책 간 연결 고리 △융복합 분야에 대한 미흡한 협치구조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전무' 등이다.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개방, 공유, 융합, 연결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 신정부 체육정책 정리

- ①생애 주기 스포츠 빈곳 메우기 : 0~18세 OK. 19~40대? 여성?
- ②공공과 민간 연결 '시도'
- ③전문 선수와 생활 체육인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도'
- ④융복합화, 시장화, 산업화 추구
- ⑤직업, 일거리 창출 기반
- ⑥급조된 정책, 정책 방향 '미완성'
- ⑦떨어지는 세부 정책 완성도, 미흡한 정책간 연결 고리
- ⑧융복합 분야에 대한 미흡한 협치구조
- ⑨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전무'
- ⑩미래 스포츠시장에 대비한 준비 '사실상 전무'

} how?

다음 장 계속

우선, 빈 연령대를 더 채워야한다. 평생 스포츠를 이루려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임산부 운동, 영유아 운동, 어린이집·유치원생 운동, 초등 전문체육교원 육성, 팝스와 국민체력100 연결 등이 과제다. 여성 스포츠 참여도 적극 유도해야한다. 체육시간 확장, 지속적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폐교실을 휘트니스공간으로 리모델링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도 적극 개방해야한다. 밤에 운동장에 불을 밝히고 지역민에 개방하면 운동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공공시설, 국공립학교 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졌다. 지역민과 학생이 학교 시설에서 함께 활동하면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 지속적인 대회 운영체계 수립, 부족한 수익 보전 등이 필요하다. 대학스포츠를 살리는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학교 운동부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체육 수업 및 스포츠 활동, 지역민 스포츠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체육대학이 앞장서야한다. 연구자(교수), 시설, 지도자, 미래 코치를 꿈꾸는 학생선수를 잘 엮기만하면 대학스포츠는 무척 활성화할 수 있다. 한강을 레저스포츠 특구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인구도 많으며 식수원 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강에서 무동력 수상스포츠부터 시작해 레저스포츠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강에서조차 4계절 수상 스포츠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 체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체육기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동시에 기금 자체를 더 모으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 흥미로운 게임방식 발굴, 모바일 판매 확대, 환급율 인상, 매출 총량제 완화, 경직된 공영화보다는 다양한 민영화로 전환이 필요하다. e스포츠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 e스포츠를 여느 스포츠 종목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팀 창단, 지역연고제를 실시하면 모든 게 잘되리라는 생각은 어리석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게 데이터 수집 정책이다. 신정부 체육정책에서는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이 미비하다. 연령대,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전국민 운동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체육관 스마트화, 대회 데이터 우선 수집, 스포츠 활동 이력 관리 및 검증 등이 세부방법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정책은 미흡한데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 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 세부 지침은 학교장 재량”

2일 학교 일상회복으로 교육활동이 정상화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후 교육부도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세부 지침은 학교장 재량으로,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 응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육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1m 이상 지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하면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 건강 시설서 현금처럼 쓰는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한다

앞으로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마일리지'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체력 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전 국민이다.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스포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76개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체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최초 체력 인증 후 등급 또는 수치 개선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센터 역시 매년 10개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적립 한도는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5만원)이다. 포인트 상한은 예산, 수혜 인원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한다.

사용처는 마일리지 가맹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점, 문화시설 등이다.

스포츠 클럽 강좌 수강이나 교실 참여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인수위원은 "세부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울산시,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2\\_0001855135&cID=10814&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2_0001855135&cID=10814&pID=10800)

파주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50216591939491>

학교 체육대회도 마스크 벗는다... "관람자는 껴야"

<https://www.news1.kr/articles/?4667931>

화순군, 초·중·고등학생 '체험·체육활동비' 지원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20244?ref=naver>

김포시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214055833298>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진행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20271?ref=naver>

창원 '병역 명문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받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0108082675885>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시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52714>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16009>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